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804
----------	------

발의연월일 : 2020. 11. 2.

발 의 자 : 백혜련 · 소병철 · 이광재  
정일영 · 송기현 · 김종민  
임호선 · 박범계 · 김민기  
허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검사 제도는 수사대상 사건의 신속한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적 의혹과 정치적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3심인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면 수사대상 사건의 진상규명은 완료되어 특별검사의 임무는 사실상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특별검사 활동기간의 종기는 국가예산을 절약한다는 측면에서도 고려되어야 함.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를 준수하고, 국가예산을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제3심 재판을 통해 수사대상 사건의 진상규명이 완료되었으나 재판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공소제기한 사건의 상고심 접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으나 상고심 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검찰청에 해당 사건을 인계한 다음 특별검사로 하여금 특별검사 업무의 종료를 선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5항 신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특별검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대검찰청에 인계하고 퇴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의 공소유지와 처리보고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하되, 처리보고는 대검찰청 또는 관할 검찰청 검사장이 하여야 한다.

1. 공소제기한 사건의 상고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2. 공소제기한 사건의 상고심 접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으나 상고심 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대검찰청 또는 관할 검찰

청 검사장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퇴직 등) ① ~ ④ (생략) <u>&lt;신 설&gt;</u>	제14조(퇴직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특별검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대검찰청에 인계하고 퇴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의 공소유지와 처리보고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하되, 처리보고는 대검찰청 또는 관할 검찰청 검사장이 하여야 한다.</u> <u>1. 공소제기한 사건의 상고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u> <u>2. 공소제기한 사건의 상고심 접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으나 상고심 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한 경우</u>